



여의도포커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부 신뢰할 때까지 개혁의 끈 놓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백혜련 의원은 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낡은 사법부를 걷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며 “국민이 사법부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법 제정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기업의 잘못으로 해를 입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고,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OECD 국가 중 집단소송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은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금이다. 그만큼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통해 운용 현황을 공시하고 있지만, 증권 거래 비용이나 위탁 운용 수수료 같은 실제 운용 비용은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기금 규모가 계속 커지는 만큼 이 비용도 함께 늘어날 텐데,

내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혁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대법관 수가 늘어난 만큼, 이제는 ‘누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성별·지역·경력·다양성을 고려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해, 사법부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법관 평가 역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

효는 통합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그 의료를 집 앞까지 연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방문 간호사다. 제도는 만들었는데 현장을 지원할 사람이 없다면, 결국 피해는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돌아간다. 지역 필수요리가 뿌리를 내리고, 충분한 간호 인력이 현장을 지원할 때 비로소 통합돌봄은 현실이 된다.

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령·초범이라는 기계적 기준을 들이댈 사안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사법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각오로, 이 사건을 엄중히 마주하길 기대한다.

-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장했다.

△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기국제공항이 이 계획에 반영된다면 5월까지 최종 후보지가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전담 조직까지 꾸려놓고도 아직 후보지 선정과 실행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종합계획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경기국제공항은 경기 남부 도민의 숙원을 넘어, 첨단산업 시대의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 인프라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5년 뒤로 미뤄진다.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다.

- 하반기 국정활동의 목표는

△ 제22대 국회 하반기는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증명해야 시간이다. 출범 이후 민생 경제와 국가 시스템 회복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이다. 대외 환경도 녹록치 않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에너지·공급망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부의 개혁 과제들이 적기에 실행되어 국민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 대한민국 대도약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집단소송법 제정법안을 내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 요즘 기업의 잘못으로 해를 입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만 봐도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노출됐고, 가슴이 살근거림, 통신·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런 피해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피해를 보상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집단소송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피해자 중 몇 명이 대표로 소송을 하면, 그 결과가 나머지 피해자 전체에게도 적용된다. 기업 입장에서든 잘못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집단소송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고,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 받게 하기 위해 만들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부의 의지가 모인 지금이 제정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기업 잘못 피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국민연금 기금 운용현황 국민에 투명 공개해야 ‘조작기소국조특위’...정치 검찰 의혹 규명·차단

국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매년 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할 때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정보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금 운용의 신뢰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것들임이라고 생각한다.

부율이 99%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전 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해 영장심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사법부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의 끈을 놓지 않겠다.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최종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핵심이었다. 수십 년간 벽에 막혀 있던 그 과제를 이번에 마침내 넘어섰다. 법외국죄 도입, 재판소원 제도화, 판결문 공개 확대까지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과제들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낡은 사법부를 걷어

- 통합돌봄을 위해 지역 필수요리 강화와 간호 인력의 적정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통합돌봄은 단순히 서비스를 연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아프고 나이 들어도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살던 동네에서 끝까지 살 수 있는나의 문제다. 그런 데 지역이 병행도 없고, 의료진도 없다면 아무리 좋은 돌봄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치료 받으러 먼 길을 나서야 하거나, 결국 시설로 들어가야 한다 면 통합돌봄은 이름뿐인 제도가 된다. 지역 필수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소공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영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소비자·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